



보도시점 2024. 4. 5.(금) 16:00 배포 2024. 4. 5.(금)
(회의 종료시) 이후 사용

부족한 농번기 일손, 전방위적 지원체계 확립

- 「지진해일 대비·대응 개선대책」, 「mRNA 백신 주권 확보방안」도 논의 -

- ▷ 한덕수 국무총리,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 농번기 안정적 인력 지원을 위한 「2024년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 수립
 - 한 총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고, 농촌 현장의 문제를 조기발견·해결하는 체계를 갖출 것”
 - 농번기 인력수요의 50% 수준을 공공부문에서 지원, 외국인력 확대 등
- ▷ 지난 1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 관측,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 마련
 - 한 총리,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동해 해역의 지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우려 지역·시설을 철저히 점검할 것”
 - 관측기술 고도화 및 신속한 상황 공유, 지진해일 특성을 고려한 대피체계 개선, 지진해일 피해 저감시설의 단계적 보강·확충 등
- ▷ '27년 mRNA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주권 확보방안」 마련
 - 한 총리, “민·관협업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mRNA 백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미래의 신종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5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 대책」, 「미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주권 확보방안」,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

- '24년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공급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 월별 인력 수요(단위 : 만명, 연인원) >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2,429	50	123	142	199	393	415	157	188	265	294	183	20
10대품목	1,304	26	59	84	107	211	223	84	101	144	156	98	11

* 10대 품목 :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채소류 5개(마늘, 고추, 양파, 배추, 무), 과수 4개(사과, 배, 복숭아, 포도), 서류 1개(감자)

- 다만,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한다.

1. 중점관리 대상 상시 지원체계 구축

- 우선,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 농번기(4~6월, 8~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 각 기관별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인력부족 등 장애요인에 신속 대응한다. 한편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 또한 지자체·농업인·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무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지원단,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노무관리 역량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2. 외국인력 공급 확대

- 다음으로,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확대 ('23년 15천명→ '24년 16천명)하고, 단기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 배정규모를 '23년 35.6천명에서 '24년 45.6천명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 활용 시군도 '23년 127개소에서 '24년 13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 사정으로 적시 도입이 곤란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지자체간 업무협약 공유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 또한 일일 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23년 19개소에서 '24년 7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27년까지는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3. 국내인력 지원 활성화

- 아울러, 국내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23년 170개소에서 '24년 189개소로 확대하고,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 도시민·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활성화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과 지원을 원하는 농가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매칭함으로써 단기 인력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반 구축

- 마지막으로,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농업인력 공급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24년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신규 추진한다.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 선정된 농업인력 기숙사 10개소를 조속히 완공하고, '24년부터 '26년까지 추가적으로 1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내 농업인주택 상한면적을 확대한다.
- 또한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발작물농업화 기계화 우수모델을 확립하고 지역내 확산을 추진한다. '24년 15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27개 양파·마늘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농기계 공급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품목에 대해 기 개발된 농기계의 성능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작물별 기계화 표준 재배모델을 개발·보급한다.

< 안건 2.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 >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신속히 추진한다.
- 지난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강진(규모 7.6)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관측*('93년 이후 31년만)되었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 * 동해 묵호항 82cm, 울진 후포항 54cm, 속초항 41cm, 삼척 임원항 25cm
- 그러나 동해안 지역에 밀집된 원전 시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지진해일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 구성,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1. 관측기술 고도화 및 신속한 상황 공유

- 먼저, 예측 및 관측 기술의 고도화와 신속한 상황 공유를 통해 지진해일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조석 등 총수위를 고려한 예측 기술과 CCTV를 활용하여 지진해일 수위를 자동 산출하는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관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 현재는 지진해일 발생시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예측된 해일 높이를 기준으로 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관측된 해일 높이가 특보 발령 기준(50cm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즉시 특보를 발령한다.
- 또한, 지진해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승기·하강기 등 변동 추세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주민대피 및 일상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2. 지진해일 특성을 고려한 대피체계 개선

- 지진해일 높이 등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대피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긴급대피장소도 활용이 용이하도록 보완한다.
- 현재 주의보와 경보단계의 대피 기준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일 및 해발 높이, 지형특성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피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 예시 : (주의보) 바닷가 대피 및 해안가 출입 통제 / (경보) 주민·선박 긴급대피
- 또한, 지진해일 발생 시 도선사가 승선하지 않은 선박이라 할지라도 긴급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도선법」을 개정한다.

3. 피해 저감시설의 단계적 보강·확충

- 지진해일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 및 확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항만, 국가어항 및 원전 항만 시설의 방파제, 호안(제방등을 보호하는 공작물) 등을 연장하거나 높이를 올리는 등 보강사업을 실시한다.
- 또한, 침수위험이 높은 연안의 토지를 공원이나 방재림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안심해안(해수부)’ 및 ‘해안방재림(산림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4. 지진해일 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 그간 지진 위주의 교육과 훈련에서 벗어나 지진해일 전문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진해일 국민행동요령도 알기 쉽게 바꾼다.
-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매년 정례화하고, 강원·경북 등 동해안 4개 시도 및 22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지진해일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 또한,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대피할수 있도록 행동요령도 카툰 형식으로 개선하고 선박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선박대피요령도 별도로 제작·홍보할 예정이다.

< 안건 3. 미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주권 확보방안 >

- 향후 5년 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팬데믹이 도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 백신의 국내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27년까지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기에 국민께 소상히 알릴 예정이다.

< 안건 4.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 >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개최되었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하였다.
- △과학기술 분야, △환경 분야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책임자	팀 장	장용희 (044-200-2056)
		담당자	서기관	이영승 (044-200-2535)
담당 부서 <농번기인력>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최민지 (044-200-2231)
		담당자	사무관	박재영 (044-200-2232)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인기 (044-201-1711)
		담당자	사무관	김동우 (044-201-1721)
담당 부서 <지진해일>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대섭 (044-200-2365)
		담당자	주무관	정재언 (044-200-2684)
<공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우진 (044-205-5190)
		담당자	사무관	이광태 (044-205-5191)
<공동>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수 (02-2181-0762)
		담당자	연구관	이희춘 (02-2181-0763)
담당 부서 <백신주권>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성현국 (044-200-2293)
		담당자	사무관	이혜빈 (044-200-2289)
<공동>	질병관리청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민 (042-719-7350)
		담당자	사무관	김재홍 (043-719-7353)